

제180호 (2008. 11. 10)

■ 속보/위기의 건설업

- 건설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 경제 동향

- 9월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

■ 정책·경영

- 11.3 종합 대책 중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정보 마당

- 지난 10년 간 건설업 비중 9.8%에서 7.2%로 감소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경기 부양과 SOC 투자

건설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 10.21 대책(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 정부가 실물경제의 가장 핵심 요소인 부동산, 건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업체 보유 미분양 아파트와 택지 매입 등 건설 부문에 최대 9조 2,000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우선 3조원을 투입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함. 건설사 부실의 핵심 미분양 아파트도 내달부터 2조원 범위 내에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함.
- 정부는 주택 거래 위축과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가계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CD금리 안정화를 유도해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함. 이 밖에 투기지역에서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중복 보유 허용 기간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지원 대책	내 용
가계 부담 완화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확대 · 가계대출 부담 완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시장 원리 바탕)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 채권 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공공 부문 활용)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 공동택지 제3자 전매 허용 ·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 11.3 경제종합대책(건설 · 부동산 부문)

- 정부의 11.3 대책 중 건설,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등임.
 -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함.
-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향후 2년 안에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함.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고 소형주택 의무 비율도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함.
- 건설 부문 위기는 경제 전반의 침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물경기의 침체를 극복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음.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임.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현재의 유동성 부동을 해결하는 방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함.
- 건설업체 차원에서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 작금의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방에 물량을 쏟아놓은 건설업체가 1차적인 당사자이고 책임자임. 건설업체는 감원과 임금 삭감,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정부와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

11.3 경제종합대책(건설 · 부동산 부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재건축 규제 완화	·소형의무비율(85㎡ 이하 60% 이상) 탄력 적용 ·용적률 법정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 ·계획 용적률 초과분의 30~50%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2008년 11월 2009년 1월 2009년 1월
양도세 완화	·향후 2년 내 취득한 지방 미분양은 일반세율(9~36%)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간 최대 30%) 허용 ·1주택자 지방 주택 취득시 1주택자로 인정(지방 주택은 중과 배제)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환원(서울, 과천, 신도시만 2년 유지)	2008년 11월
분양권 전매	·수도권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과밀억제권역 : 계약 후 5~7년, 기타 지역 : 3~5년	2008년 11월
투기지역 해제	·강남 3구 제외한 주택 · 토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	2008년 11월
건설사 지원	·관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토지공사 공동택지 연체 이자 부담 경감	2008년 11월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9월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

- 향후 2~3년 뒤 주택 수급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돼 -

- 2008년 9월까지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19만 5,885호로 과거 외환 위기 직후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등과 비교하였을 경우, 연간 2008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35만호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최근의 주요 건설업체들의 위기설과 더불어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자금 유동성 위축은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 공급 능력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과거(1998 ~ 1999)와 현재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단위 : 호)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적 (1~9월)	연간
2008년	20,841	13,211	14,245	34,109	26,023	23,831	22,805	22,086	18,734	195,885	35만 내외
1999년	17,698	12,914	19,328	22,343	26,018	29,193	20,292	23,665	33,522	204,973	404,715
1998년	34,166	29,809	26,606	22,890	23,155	29,516	22,144	10,830	18,784	217,900	306,031

자료 : 국토해양부.

- 2003년 「주택종합계획(2003 ~ 2012)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연간 주택 수요는 약 45만호 가량으로 2008년도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부족분(약 10만호 내외 추정)은 향후 2~3년 뒤의 주택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008년 9월 중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전월(2만 2,086호) 대비 15.2%가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5만 5,745호) 대비 66.4%가 감소함.
 - 수도권은 전월 대비 57.8%, 전년 동기 대비 81.1%가 감소한 6,365호로 비교적 지방에 비해 사업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감소를 보임.
 - 지방은 전월 대비 77.1%가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44.1%의 감소세를 나타냄.
- 민간 부문의 공급 실적은 전월 대비 1.5%, 동월 대비 66.1%가 감소하여 전월에 이어 연속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0%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39.7%, 동월 대비 67.3% 감소함.

- 9월에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감소를 보임.
- 규모별로는 전월 기준으로 85~135㎡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동월 기준으로 40㎡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2008년 9월까지의 누적 실적은 2007년 9월까지의 누적 실적에 비하여 60㎡ 미만은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이 증가한 반면, 60㎡ 이상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
- 최근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은 주요 주택건설업체들의 위기설과 더불어 2개월 연속 2007년 월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의 1/3 수준에 머무는 등 급격한 위축세를 보임.
- 수도권과 지방, 민간과 공공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위축을 보임.

〈지역별·규모별·부문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분	2007. 9		2008. 8		2008. 9				
	주택 수		주택 수	비중	주택 수		비중	전월비	동월비
	당월	누적			당월	누적			
계	55,745	280,490	22,086	100.0	18,734	195,885	100.0	-15.2	-66.4
서울	13,182	42,173	15,100	68.4	1,522	39,271	8.1	-89.9	-88.5
부산	5,079	26,616	113	0.5	50	6,143	0.3	-55.8	-99.0
대구	2,305	10,070	1,097	5.0	703	14,634	3.8	-35.9	-69.5
인천	4,464	17,084	3,116	14.1	1,546	17,688	8.3	-50.4	-65.4
광주	1,117	9,137	33	0.1	305	815	1.6	824.2	-72.7
대전	46	1,324	81	0.4	69	5,296	0.4	-14.8	50.0
울산	4,007	16,114	104	0.5	1,348	4,168	7.2	1196.2	-66.4
수도권	33,615	134,291	15,100	68.4	6,365	100,053	34.0	-57.8	-81.1
지방	22,130	146,199	6,986	31.6	12,369	95,832	66.0	77.1	-44.1
민간 부문	41,179	248,041	14,190	64.2	13,973	162,115	74.6	-1.5	-66.1
공공 부문	14,566	32,449	7,896	35.8	4,761	33,770	25.4	-39.7	-67.3
40㎡ 미만	2,166	17,295	4,583	20.8	2,273	24,282	12.1	-50.4	4.9
40~60㎡	6,547	34,208	4,720	21.4	3,504	36,881	18.7	-25.8	-46.5
60~85㎡	27,187	116,477	4,815	21.8	4,307	70,003	23.0	-10.6	-84.2
85~135㎡	15,036	79,547	5,093	23.1	5,926	46,851	31.6	16.4	-60.6
135㎡ 초과	4,809	32,963	2,875	13.0	2,724	17,868	14.5	-5.3	-43.4

자료 : 국토해양부.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건설 투자 확대로 경기 활성화 견인, 유동성 위기 지원은 미흡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 중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 건설·부동산 부문 투자 확대로 실물경기 활성화 도모

- 지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이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발표(11.3)
 -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실물 부문의 위험 요인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 의도를 표명
 - 주요 내용은 4.6조원 규모 공공 지출의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공공 건설 부문의 신수요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SOC 사업 내용은 교통 및 물류 기반 시설, 지방 중소 시설 개량, 하천 정비 및 저수지 준설 등 물 관리 시설 수요, 30대 선도 프로젝트 지원)
 -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실수요 목적의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공장 신설 허용 및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임.
- 이번 대책은 지난번 건설업 유동성 지원에 이어 건설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다수 포함
 - 미분양 적체로 민간 건축 부문의 투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SOC 재정 지출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건설 투자 확대 도모
 - 수도권규제지역 해제(강남 3개 제외)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및 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등 주택 구매 수요 진작 도모
 - 관급 공사 계약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증 규모 확대(당초 업체당 70억원→300억원),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대금납부 연체이자 경감.
 -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물량을 신속적으로 공급(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 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을 물량 산정시 배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도권의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

■ 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로 숨통 틔었으나,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

- 재건축 사업의 핵심 규제인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초과이익환수 중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이 다소 완화되고 임대주택건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계기를 마련
 -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은 지역 실정에 따라 80㎡ 이하를 60% 공급하도록 탄력 적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임대주택의무건설은 폐지하되 상향 조정되는 용적률의 30~50%의 범위 안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대체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기존 방식보다는 조합원들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관련 법령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인데다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규제완화에 따른 사업 활성화는 2009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지역 해제 효과, 得 적고 失은 많아…건설업 유동성 지원 규모 여전히 미흡

-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늘어났으나, 버블 세븐지역 중 일부는 주택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등 담보가치가 하락한데다가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출 행태로 규제 완화가 곧 추가 대출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금융기관들의 원화 조달에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가계에 대한 추가담보대출 여력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매도세 우위인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분양권전매제한 완화는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
-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의 보증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건설공사 규모의 특성상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외환위기 당시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의 보증 규모를 기업의 연매출액의 1/4 수준까지 지원한 사례를 볼 때 업체당 300억원 규모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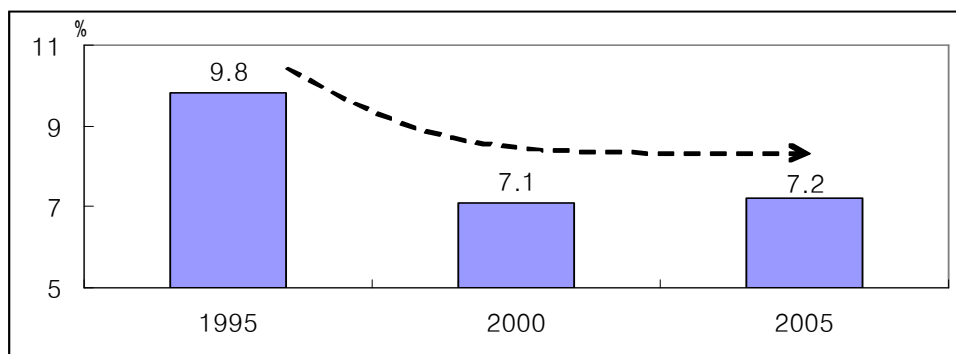
지난 10년 간 건설업 비중 9.8%에서 7.2%로 감소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

■ 건설업 총산출액 150.6조원으로, 비중은 7.2%로 10년 간 1/4 감소

- 지난 10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산출액은 150.6조원으로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나타남.
- 건설업 비중은 1995년도 9.8%에서 10년 사이에 무려 2.6%p나 감소한 것으로서 IMF 외환 위기 당시 크게 위축된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주택·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업도 동반 호황을 누렸을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은 사실과 다름을 보여줌.
- 또한 이러한 건설업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일본 건설업의 2005년도 비중 6.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임.

건설업 비중 추이



- 총산출에서 건설 자재 등의 중간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로 전 산업 평균 중간 투입 비중 58.8%, 특히 물적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평균 70.3%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이 물적 생산 요소에 대한 의존보다는 SW 요소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
- 중간 투입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4.0%p나 감소하여 전 산업(평균 3.5%p 증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여, 생산 방식에 많은 급격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

■ 산업연관효과 다소 줄어들었으나, 경기조절능력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 생산유발계수는 2.020로서 전 산업 평균 1.926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역전됨.
 - 생산유발계수는 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 효과의 합계를 말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2로 제조업의 0.650보다 훨씬 크지만, 서비스업의 0.86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의 0.850과 비교해 근소하게 낮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일본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0.895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수입유발계수는 0.188로 제조업의 0.350, 전 산업 평균 0.259와 비교하여 현격히 낮음.
 - 이는 건설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재의 투입이 적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국제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
 - 수입유발계수는 1995년 0.150에서 2000년에는 0.164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산업연관효과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전 산업	1.926	0.741	0.259
건설업	2.020	0.812	0.188
농림어업	1.746	0.865	0.135
광업	1.722	0.847	0.153
제조업	2.064	0.650	0.350
서비스업	1.695	0.865	0.135

- 금번 새로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건설업의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산업연관효과가 커서 경기조절능력이 여전히 우수한 산업임을 다시한번 입증한 것으로 해석됨.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 주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회의 참석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1.5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시장분석팀 주최 EWS지표 점검회의 참석 9월 주택·부동산 관련 지표의 점검 및 최근 시장 동향 관련 논의

■ 주요 대외 활동 추진 현황

- KBS TV “심야토론” 토론자 참여
 - 11. 2, KBS 주최 “부동산 활성화 대책, 효과 있나?”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
 - 최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향후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제시
-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
 - 11.3,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방안” 주제발표
 -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움직임과 관련, SOC 확충 및 관련 세제 준치의 필요성 제시
- 인천광역시·인천시회 주최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 대토론회” 주제발표 참여
 - 11. 5, “최근 건설경기 동향과 건설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건설업 활성화 방안 제시
- 건협 경남도회 주최 “경남도회 연찬회” 주제발표 참여
 - 11. 5 “건설경기 및 정책의 동향과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건설정책의 방향성과 이에 대응한 건설기업의 대응방안 제시

■ 기타 연구원 활동

- 『2009년 건설 및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 11(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프로그램
 - 주제발표 1 : 2009년 건설경기 전망(이홍일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2009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김현아 연구위원)
 - 사회 및 토론 : 조주현 건국대 교수 외 6인
 -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팀(02-3441-0701, 0896)

경기 부양과 SOC 투자

미국발 금융 ‘쓰나미’의 공포가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태산(泰山)이 명동(鳴動)하고 있으나, 그 단초는 실로 서일필(鼠一匹)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가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경제의 명운을 위협하는 ‘괴물’로 덩치를 키운 것이다.

그리고 금융 또는 신용 공황의 거친 물결이 실물경제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금융이 경제의 피와 같으니 어쩌면 정해진 수순일 수 있다. 선진 각국은 그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메가톤급 선제 대응들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예단하면서 자국 시장의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는 대책들이다. 우리 경제는 혹독했던 IMF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아직은 가늠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기업과 국민의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신뢰할 만한 정책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그 첫째가 재정 지출의 확대요, 두 번째는 감세 정책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이다. 이 중에서 단기적 부양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재정 확대이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조원 규모 증액하여 재정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정부가 재정 확대 방침을 천명하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키로 한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에 비춰 타당하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기왕이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SOC 시설 투자는 탁월한 용처이다. 서민들을 포괄한 단기적 내수 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OC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 또한 다른 어떤 산업 분야를 압도한다.

일각에서는 SOC 시설 투자를 두고 시대착오적인 혹은 1970년대 개발 시대로의 회귀 운운하며 비판한다. 그렇지 않다. 1970년대의 SOC 투자가 2000년을 지향했다면, 2000년대인 오늘은 2100년을 바라보는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 정책의 성패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대처하면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국부(國富)를 담보하는 일거다득(一舉多得)의 선택에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흥수(원장:hskim@cerik.re.kr)

